

##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경찰의 당면과제\*

조동운\*\*, 박동균\*\*\*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가장 가시적인 존재가 바로 '경찰'이다. 경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체포·수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 지킴이이다.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은 경찰의 존립근거이자 존재목적으로서, 국가와 국민이 경찰에 바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예방을 넘어 국민의 불안과 위해요인까지 사전에 배제하는 경찰로 거듭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증가하는 치안수요와 환경변화에 따른 경찰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즉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각종 활동과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무동기범죄와 성폭력, 학교폭력에 적실성있게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경찰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안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향후 한국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테러리즘 발생의 위험성, 위험사회 도래에 따른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따른 문제점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경찰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예방과 진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뿐만 아니라 테러리즘, 각종 재난발생 등 위기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다. 이들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단순히 범죄에 대응하기 보다는 범죄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주제어:** 치안환경, 치안수요, 다문화, 테러리즘, 사회적 약자

### 1. 서론

현대 사회는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이른바 '위험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전세계는 극심한 자연재난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2012년 10월 대형 허리케인 샌디는 최첨단 도시인 뉴욕을 비롯한 뉴 저지주 등의 여러 마을에서 100여명이 넘게 죽고, 수십일 동안 전기가 들어오

\* 이 연구는 2013년 2월 1일 한국치안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지 않는 등 최첨단 과학기술 앞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잦은 태풍과 폭설 등 다양한 자연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작년을 돌이켜 볼 때,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성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는 국가 치안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으며, 묻지마 범죄, 청소년들의 자살을 불러온 학교폭력,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리아, 리비아 등 전세계 각국에서 각종 테러리즘 등이 끊이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결코 테러리즘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북한이나 국제 테러리즘, 자생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전통적인 안보분야만이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위기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죽고,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으로 인해 수 만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각종 인적 재난 등으로 수 천명이 희생되는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 국가들은 이 사건들을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다룰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런 점에서 9·11 테러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인 안보’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치안시스템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치안의 현황과 치안수요를 분석해 보고, 치안의 중심 축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경찰의 정책과제로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치안서비스 대응과 다문화에 대한 대응, 급증하는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위험사회 속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관련 기관의 정책 보고서와 간행물,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 등의 2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 접근방법(descriptive approach)을 활용하였다.

## II. 연구의 기초논의 : 한국의 치안수요와 현황

최근 한국사회는 현대 위험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새로운 치안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 및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 형태의 강력사건 발생으로 국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이 증가하고, 사회 양극화로 따른 ‘외톨이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sup>1)</sup>

또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강력범죄 발생 시, 사회적 파급성이 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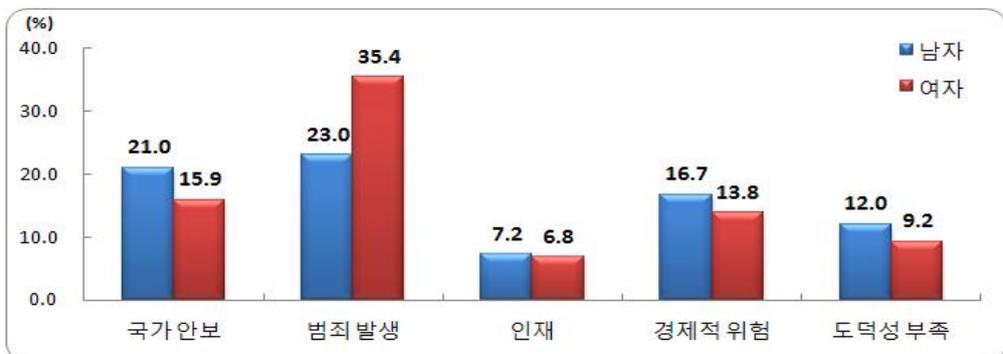
1)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2012.4.1), 의정부역 흉기 상해사건(2012.8.18), 서울 광진구 부녀자 강간살인사건(2012.8.20), 수원 가정집 침입 살인사건(2012.8.21), 여의도 살인미수사건(2012.8.22) 등

국민들의 안전욕구가 높아감에 따라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5대 범죄 발생 건수 및 112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로 치안수요가 점증하고 있다.

가정·학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약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함께 여성·청소년<sup>2)</sup>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점증하고 있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소년범의 저연령화로 인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12세 이상→10세 이상)으로 보호·선도대상 청소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금융사기 등 서민대상 범죄 및 인터넷·스마트폰 악용범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찰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경찰조직 전체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부문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가정·외국인 노동자 등 인구구조의 다양화, 사회 양극화로 비정규직·실업률 증가, 소득 불균형 심화, 가치관의 변화로 개인주의 심화, 웰빙 중시현상과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정보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성화, 가상공간의 확대, 정보기기 보급 확산, 신기술 개발 및 발전으로 기술간 융합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교통물류의 발전으로 자동차 보급 확산, 해외여행의 증가와 정치·경제부문에서는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사회갈등의 다원화, 시민사회단체 활동 증가, 북한정권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급증과 경제성장의 정체와 가계경제 침체, 양극화·다문화·정보화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경찰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에서 전국의 17,42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약 37,000명)을 대상으로 2012. 5. 23.~6. 5.(14일) 동안 조사하여 집계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은 ‘범죄 발생’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2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국가안보’ 18.4%, ‘경제적 위험’ 15.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범죄 발생을 사회의 주된 불안요인으로 생각하는 비중은 여자의 경우 35.4%로 남자 23.0% 보다 크게 나타났다(통계청, 2012).



<그림 1>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2) 청소년은 범죄문제에 있어 가해자로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도 둘다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Saney, 1986: 40).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총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은 2011년에 1,752,598건 발생에 1,382,463명을 검거하였고, 시·도별 범죄발생 비율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46.3%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총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발생	1,836,496	2,063,737	2,020,209	1,784,953	1,752,598
검거	1,615,093	1,812,379	1,811,917	1,514,098	1,382,463

※ 자료: 경찰청(2012: 92).

<표 2> 시·도별 범죄발생 현황

구분 시도별	총범죄	범죄비율(%)	구분 시도별	총범죄	범죄비율(%)
계	1,752,598	100	강 원	55,061	3.1
서 울	358,620	20.5	충 북	48,236	2.8
부 산	126,411	7.2	충 남	63,054	3.6
대 구	96,265	5.5	전 북	58,570	3.3
인 천	82,870	4.7	전 남	63,780	3.6
광 주	63,672	3.6	경 북	90,480	5.2
대 전	47,473	2.7	경 남	120,418	6.9
울 산	36,848	2.1	제 주	24,706	1.4
경 기	369,543	21.1	기 타	46,591	2.7

※ 기타: 경찰청 3건, 해경 46,588건; 자료: 경찰청(2012: 93).

그리고 경찰은 2011년 주취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주취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주취로 인한 폭행 및 공무집행사범 총 1,068명을 검거, 938명을 구속하였다.

그 외에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자금난의 악화로 생계침해형 범죄가 수년간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현장출입·조사권 및 긴급 임시 조치권을 발동하여 2011년 14건에 불과했던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결정이 2012년에는 114건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 인천 임산부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

잇따른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과 관련해 범인검거 뿐만 아니라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은 그 개념을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과거 불량씨클 또는 일진문화에서 기인한 것과는 달리, 교실 내에서 괴롭힘이 전제된 일상적 폭력문화로 변화하고 있다(강소영, 2012: 3).

최근 국제교류가 증가하면서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여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는 측면도 있었다. 또 다문화가정의 이면에 숨은 문제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청, 2012: 10). 이러한 다문화 가정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제적 기반과 일부 남아있는 사회·문화적 차별로 인하여 안전에 있어 새로운 취약계층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경찰활동은 다문화사회에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달리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치안서비스 제공활동을 말한다(이강훈, 2012: 46).

실제로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으로 체류외국인 매년 증가하고 있다.<sup>3)</sup> 외국인가정 이혼 증가 및 국적별 공동체 증가에 따른 치안부담요인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인 범죄피해 구제 및 잠재적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시책 발굴에 노력하고 외국인 체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와 피해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도움센터’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경찰청, 2012: 13-15).

이러한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경찰이다. 이와 같은 경찰은 국민과는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경찰은 국민의 의지와 동의로부터 권위가 발생하고, 그들로부터 선발한다(Roberg, 1976: 96). 하지만 한국경찰은 아직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경찰의 당면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I. 한국 경찰의 당면과제

현대 민주국가에서 경찰은 주로 범죄에 대응하는 중요기관으로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Bayley, 1994: 143). 실제 경찰업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경찰의 업무는 그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동시에 각 영역별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찰조직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치안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이상원·조현빈, 2012: 7).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경찰법 제3조)이고 직무의 범위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로 규정되어

3) 체류외국인: 2005년 75만여명 → 2011.11월 140만여명으로 90%가 증가하여 전체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있다.

현재 한국 경찰력의 49.8%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구대나 파출소가 4부제 또는 3부제로 운용이 되고 있어 항상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휴가나 병가가 제한적이고 교육기회가 있어도 근무인원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강력범죄는 2008년 54만 건에서 2012년 61만 건으로 증가, 검거 건수는 2008년 41만 건에서 2012년 38만 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실정에서 경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은 물론 과도한 초과근무 등으로 인해 치안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1.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응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가장 가시적인 존재가 바로 ‘경찰’이다.

경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체포·수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Saney, 1986: 158)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 지킴이’이다.

### 1)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으로의 경찰활동 전환

최근 발생하는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는 사회 불안과 치안부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이 국민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형성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힘으로서,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난다(Colquhoun, 2004: 7).

또한, 범죄는 그 속성상 한번 발생하면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범인검거에 초점을 맞춘 사건 중심적 경찰활동을 탈피하여 범죄취약 계층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 중심으로 치안정책의 전반적인 틀과 방향, 자원배분 등을 총체적으로 재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즉,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 취약지역을 경찰관서별 여건에 따라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취약장소를 방범시설물 확충에 따른 등급별로 분류하고 자율적 선정·관리와 범죄의 추이에 따른 지속적인 등급 조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 취약장소가 선정되면, 등급별로 집중순찰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 취약(우려) 지역은 기준에 따라 반복 순찰 및 검문검색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치안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고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외톨이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른 바 ‘묻지마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

되지 않도록 치안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선생님이나 현재 24시간 운영 중인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여 언제든지 각 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사들의 도움과 안전 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 글을 남기거나 1대1 채팅·문자(#0117)로 상담 요청 및 주변 목격자 등이 학교폭력을 알게 된다면, 피해학생을 대신하여 신고하고 가해·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표 3> 방법시설물 확충에 따른 등급별 분류

구 분		RED(취약)	YELLOW(우려)	GREEN(관심)
지역성격 (민생침해, 성폭력우범, 금융기관 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발생 多</li> <li>· 업소환경(범죄용이성高)</li> <li>· 금융기관중 경비원 미배치</li> <li>· CCTV 미설치</li> <li>· 방범창 미설치</li> <li>· 가로등·방범등 미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발생 少</li> <li>· 업소환경(범죄용이성中)</li> <li>· CCTV 설치 미비</li> <li>· 방범창 설치 미비</li> <li>· 가로등·방범등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발생 無</li> <li>· 업소환경(범죄용이성低)</li> <li>· 금융기관중 경비원 배치</li> <li>· CCTV 설치</li> <li>· 방범창 설치</li> <li>· 가로등·방범등 설치</li> </ul>
	방법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시설물 확충 촉구</li> <li>· 정기 순찰(2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시설물 확충 요구</li> <li>· 취약시간대 순찰 및 필요시 정기순찰(4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적 순찰 실시</li> </ul>

※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그리고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예전에는 ‘집안 문제’로 치부하여 경찰권 개입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집안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크고 가정폭력이 더 큰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대 경찰은 단순하게 범죄에 대응하기 보다는 범죄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다<sup>4)</sup>.

##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시스템 구축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병자 등 등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경찰 등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수치심 등으로 신고나 의사 전달이 쉽지 않고, 또한 유·무형의 제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 사회적 약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시스템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함께 사후 피해자 관리 및 지원시스템을 충분히 구비

4) 이런 점에서 경찰은 ‘범죄학자로서의 거리 공무원(the street officer as criminologist)’라고도 부른다(Peak and Glensor, 1999: 100-101).

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조사를 할 때 단순히 사실관계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피의자의 신병처리 내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중복조사를 지양하고, 조사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범인 검거를 위한 결정적 단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경찰이 너무 피해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한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의 피해자에게 수사 자체가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피해조사의 부담감을 덜어 주고 반복 수사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적절한 심리치료를 위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향후 ‘범죄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을 증원하고 범죄피해자 상담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주력하고 수사요원들에게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 등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기대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치안환경은 급변하여 새로운 치안 수요가 발생하지만 모든 치안 수요를 경찰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유관기관·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대책 등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의 극대화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경찰쇄신위원회, 2012: 45-49).

## 2. 다문화사회와 범죄에 대한 대응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세계화에 노출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단일민족에 의한 단일문화는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다(김석범, 2010: 1). 21세기는 다문화(multiculturalism)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Palmiotto, 2005: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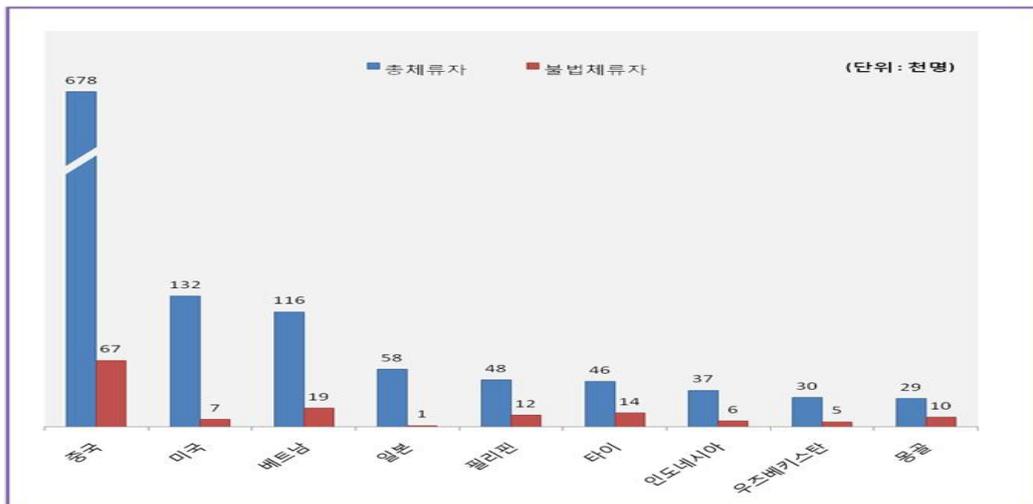
2011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 체류현황을 보면, 총 체류자는 1,395,077명이고, 합법 체류자는 1,227,297명, 불법 체류자는 167,78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sup>5)</sup>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세계화와 개방정책에 따른 입국간소화 조치와 함께 경제성장에 따른 현장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저소득 국가 중심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이 입국하기

5)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11\\_12.jsp](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11_12.jsp)

때문이다. 이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비가 비교적 싼 대도시 주변과 주요 공단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거주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취약한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생적 범죄조직들에 의한 다양한 범죄를 유발시켜 치안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다(김윤영·이상원, 2012: 4).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취업목적 불법 체류자의 출입국범죄와 SOFA 범죄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범죄가 흉포화·지능화·광역화되는 등 치안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여건상 합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법기관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sup>6)</sup>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되어 가는 치안환경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업무로 경찰의 역할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경찰은 단순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자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Palmiotto, 2005: 36-37), 더 나아가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따른 여러 문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능동적인 변화담당자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의 경찰의 역할은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봉사자로서 역할도 병행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김석범, 2010: 79).



〈그림 2〉 외국인 체류현황(2011. 12. 31. 현재)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자료실.

6) 경남 마산 소재 노래방 내에서 불법체류 중 상습적으로 도박(속디아)을 한 베트남인 피의자 20명 검거(2009.7.13, 부산), 중국·태국 출신 불법체류 여성들을 고용,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16명 검거(2009.4.9, 서울), 중국 전화사기 조직과 공모, 불특정 내국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경찰 등을 사칭, 카드 도용·수술비 환급 등을 빙자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도합 150억원을 편취한 중국인 50명 검거(2009. 5.19, 대구), 자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도박빚을 갚지 못한 베트남인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협박, 1억7천만원을 강취한 베트남인 5명 검거(2009.1.5, 경기) 등(김영록, 2011: 13-19).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화와 개방화의 영향,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진입,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은 국가, 인종, 민족 간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교통·통신 등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조직 역시 세계화되었다. 거리적·장소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범죄의 국제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고, 범죄의 국제화 현상과 함께 범죄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그 피해 규모나 파급효과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김영록, 2011: 10).

국제성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간의 신속한 정보 교환과 정보 수집의 확대를 비롯한 공조수사가 필수적인데, 경찰과 출입국관리국, 검찰,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외교통상부, 주한 외국공관, 중소기업청 등 국제성 범죄와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제성 범죄를 저지른 후 즉시 외국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검문소와 공항, 항만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관서 등에 출국로를 차단하여 외국으로 도피할 수 없도록 신속한 수사공조를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한 외국공관 및 공항, 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세관 등과 협조하여 범인의 신원파악과 출입국 사항 등을 파악하여 수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각 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국제성 범죄에 대한 한 차원 높은 공동대처 방안 강구(김민재, 2007: 118) 및 범죄도 세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성범죄 수사의 전담요원화가 요구되고 있다.<sup>7)</sup>

또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결혼이민자·자녀 등의 범죄피해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167,090명 중 최저 빈곤층은 52.9%, 가정폭력 피해 등 경험자 17.5%로 파악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같이 한국인 배우자의 과도한 폭력으로 실명, 골절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피해여성 사례까지 보도되고 있어(변화순 외, 2008: 4),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정의 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들을 위한 폭력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으로 개선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특히,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경찰의 개입과 역할이 다른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역할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적정한 치안유지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려는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혜림, 2010: 21).

### 3.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7)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경찰청에 국제수사연구소를 두고, 국제수사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국제범죄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한 경찰관 중에서 다시 적격자를 선발하여 현지 어학연수까지 실시하고 있다(김민재, 2007: 113).

테러리즘은 인류역사와 함께 생성, 존속하여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Wardlaw, 1982 : 43).

1995년 3월 20일 동경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린가스 테러사건,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워싱턴 국방부 건물에 납치한 여객기를 충돌시킨 9·11 테러<sup>8)</sup>, 2004년 3월 11일 스페인 총선 직전에 발생한 마드리드 열차폭탄 테러, 2005년 7월 7일 런던 지하철역 3곳과 2층 버스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한 사건 등 대형 테러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은 테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박동균, 2009: 89-111).

국내에서는 국제테러단체 또는 과격사상 추종자 등에 의한 테러사건은 없었으나 경기도 안산, 인천 등 수도권 공단지역 등의 무슬림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외 테러위협인물 도피 및 테러자금 조달 징후가 지속 포착되고 무슬림 귀화자(1,400여명), 이민자 2세(1,300여명), 정치·사회적 불만세력 등에 의한 자생테러 위협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 6개국에서 28건의 테러피해·위협사건이 발생, 2010년 21건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데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팀 PRT기지(15건), 이라크 유전개발 현장, 필리핀 발전소 건설현장, 예멘 송유관 등지에서 총 22건이 발생하였다. 나머지는 해적피해(피랍모면 포함)로 6건이 발생하였다(경찰청, 2012: 239-24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7월에 국내에서 탈레반 연계세력의 불법 활동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격 반미투쟁·지하드를 선동하는 이슬람 국가인이 포착되는 등 테러위협이 있었다. 2009년 8월에는 국내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거점지역인 칸다하르로 마약원료 물질을 밀수출하던 일당이 검거되었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슬림이 지하드 선동행위로 검거되기도 하였다. 2010년에는 국내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 테러위협이 지속되었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팀(PRT) 파병 등 국제사회의 이목 집중으로 인해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바,<sup>9)</sup> 해외에서는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 연쇄테러 당시 우리 공관원·기업인 등이 호텔에 일시 억류되었다가 탈출하기도 하였으며,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는 한국 선원이 승선한 선박이 3차례나 해적에 피랍되기도 하였다. 또한 레바논·필리핀·아프가니스탄 등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등에 대한 테러위협도 있었다. 2010년 3월에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예멘에서 알 카에다의 자살폭탄테

8) 2001년 9월 11일 아침, 19명의 알 카에다 요원들이 네 개의 팀으로 나누어 상자커트용 나이프를 이용하여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였다. 테러리스트들은 별 저항을 받지 않았고, 워싱턴의 펜타곤과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졌다. 이 테러리즘의 피해는 2,998명의 사망자와 함께 측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인 피해를 남겼다. 미국인들은 이 사건을 일컬어 ‘제2의 진주만 공격’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 건국 이래 본토의 중심부가 외부의 공격을 받은 것은 9.11 테러리즘이 처음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테러리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미국국민들은 9.11 테러로 인해서 테러리스트들은 어떠한 수단도 사용할 수 있고, 대규모의 민간인 피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은 위협의 정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게 되었다(박동균·박기범, 2012: 104).

9) 2009년 11월 탈레반 대변인이 한국군 파병에 대한 보복경고 성명 발표 등.

리로 피해를 입었고, 6월에는 NGO소속 봉사요원이 피랍 후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7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호텔 연쇄 폭탄테러로 우리 기업인 1명이 부상당하였다. 또한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가 탈레반 지역사령관으로부터 테러협박을 받았으며, 11월에는 탈레반이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팀 파견 중단을 촉구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폭탄테러를 경고하는 등 테러위협이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테러 위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태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근로자들과 남한에 대한 테러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간 거점지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탈레반 연계세력, 무슬림 단체 및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테러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서해교전, 2008년 7월 11일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박00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 2008년 8월 검거된 여간첩 원정화사건 등 만약에 있을지 모를 전쟁 및 위기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대 테러의 양상으로 볼 때, 테러는 특정요인을 노리는 행태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박동균, 2009: 89-111).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는 경찰의 임무 중 테러리즘의 예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테러현장에서 첫 번째 대응자(first responders)로 훈련되어야 하고, 테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며, 연방정부와 여러 테러대응기관들과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Palmiotto, 2005: 317).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정보활동 강화로 테러정보 수집능력 제고, 경찰과 민간경비<sup>10)</sup>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 4. 위험사회 속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면서 각종 재난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둔화, 실직, 교육, 건강, 에너지 서비스 공급 차질 등 간접비용의 증가 및 글로벌 생산·소비 체제(global supply chain 등)로 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영향은 다른 지역으로까지 파급·확대되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후 대응책을 사전에 명확하게 수립하지 않은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악화되고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와 보상 범위가 사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가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대형재난의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단기간에 조달해야 하는 유동성 문제도 발생하

10) 대테러정책은 어느 한 기관이나 조직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부기관, 군대, 법집행기관, 정보부서, 위기대응부서 등 다양한 공경비기관 및 민간경비 산업 등 각종 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은 최근까지 범죄 및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경찰과 여타 형사사법기관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의 예산삭감에 따른 공공 법집행기관의 비용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어, 민간경비 산업이 그 이전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Fischer, Halibozek, and Green, 2008: 41).

고 있다(기획재정부, 2012: 2).

경찰의 치안서비스는 각종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에게 봉사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의 경찰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종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위기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이 중시된다(박동균, 2004: 179-215).

경찰은 범죄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More, 1992), 국가 권위의 상징이며, 법집행의 힘과 수단, 훈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각종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며, 최상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행정력 등이 재난에 있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경찰 혼자만의 역량으로 각종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는 없다. 앞으로 각종 재난,<sup>11)</sup> 테러,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가장 빠르게 현장을 통제하고 재난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닌 다양한 시나리오의 개발과 예방의 개념보다 대비·대응의 역량 확보가 중요하고, 경찰·소방·관·군·민간단체 등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립이 중요하다.

평상시에도 경찰과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주민들과의 협조체제를 사전에 결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고립된 사건에 대응하기 보다는 범죄와 무질서의 원인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지향적인(problem solving approach)’ 접근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박동균, 2004: Bright, 1992: 74).

#### IV. 결론

경찰의 치안능력은 사회간접자본의 일부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치안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치안수요를 고찰하고, 아울러 한국경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과 함께 다문화, 테러, 각종 재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1)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범죄예방과 진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사법기관이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뿐만 아니라 테러리즘, 각종 재난발생 등 위기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하므로 이들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의 경찰활동은 범죄인지 능력과 범인검거 능력을 향상시켜 많은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전통적인 법집행 경찰활동이었지만, 현대의 경찰활동은 지역사회공동체의 모든 분야와 협력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의 전환하고 있다(Peak and Glensor, 1999).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조직과의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kogan, 2006: 28). 지역사회로부터 여러 요구나 생각을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전략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 국민을 좀 더 가까이 함께 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도보순찰, 봉사, 지역사회 조직화, 시민친화적 접촉순찰(citizen contact patrols) 등이 포함된다(Eck, 1993: 66).

범죄예방을 통한 범죄통제는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하여 얻은 결론인 것이다. 이러한 범죄예방활동은 바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직결되고, 또한 경찰과 지역사회공동체와의 접점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이운주, 2004: 263).

경찰은 법집행을 통한 단순한 범죄와 싸우는 자(crime fighter)의 지위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자(problem solver) 또는 사회봉사자(service provider)로서의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활동의 80-90%는 가정혼란(family disturbance), 교통사고 처리, 실종자 수색, 교통통제, 수많은 위험과 재난대응 등 비범죄적 활동이다(Palmiotto, 2005: 36-37) 그리고 치안서비스의 객체로만 여겨졌던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석청호, 2003: 94).

우리나라에서,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는 사회불안과 치안부재의 불안감과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바, 한국경찰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의 수호자로서 경찰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경찰의 존립근거이자 존재목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경찰에 바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예방을 넘어 국민의 불안과 위해요인까지 사전에 배제하는 경찰로 거듭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기 스스로 타인의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치안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범인의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에 더욱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각종 다양한 형태의 경찰의 기본적인 역할과 활동과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무동기범죄와 성폭력,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경찰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합

게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정체성 재정립, 국민중심의 가치를 전 경찰관이 공유하고 경찰활동을 통하여 실천하고 치안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장 경찰관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은 경찰의 존립근거이자 존재목적으로서, 국가와 국민이 경찰에 바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예방을 넘어 국민의 불안과 위해 요인까지 사전에 배제하는 경찰로 거듭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끝으로, 자생 테러리즘 등 각종 테러발생의 위험성,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따른 문제점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경찰의 역할이 좁은 의미에서 법집행을 주로 의미했지만 최근 현대경찰은 질서유지와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 아울러 단순히 범죄에 대응하기 보다는 범죄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강소영. 2012. 학교폭력의 상호작용적 발생요인 분석. 치안정책리뷰 32.
- 경찰쇄신위원회. 2012. 경찰쇄신권고안.
- 경찰청. 2009. 미래비전 2015.
- 경찰청. 2005.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 경찰청. 2012. 경찰백서.
- 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권길라잡이(경찰편).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2012. G20 재난위험관리(DRM) 사례보고서 주 요내용 및 향후 전망. 글로벌 정책리뷰 12.
- 김명대. 2010. 다문화사회의 경찰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재. 2007.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 김상호 외. 2005. 경찰학개론. 법문사.
- 김석범. 2010. 다문화사회에서의 경찰의 역할. 경찰청국외훈련연구과제(2010.12).
- 김선우. 2010. 다문화사회의 범죄문제와 경찰의 대응. 한국경찰학회보. 12(3): 37-60.
- 김영록. 2011. 치안환경의 국제화에 따른 외사경찰의 역량 제고 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남. 2005. 경찰학개론. 박영사.
- 남재성. 2008. 역대 치안총수의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살펴본 경찰정책의 과거와미래. 한국경찰학회보. 10(1): 43-71.
- 박동균. 2004. 한국 경찰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179-215.
- 박동균. 2009. 한국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국가대비전략. 한국테러학회보. 2(1): 81-111.
- 박동균, 박주상. 2012. 현장경찰관의 근무환경 사례분석. 한국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동균, 박기범. 2012. 9·11 이후 미국 대테러리즘의 최근 경향과 시사점. 한국테러학회보. 5(3): 102-121.
- 박종선. 2012. 아동성폭력 전문가 참여제 성과 및 발전방안. 치안논총. 28(1): 185-217 .
- 박현호. 2007.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방안. 한국경찰연구. 6(2): 33-68.
- 법무연수원. 2011. 범죄백서.
- 서보학. 2011. 국민의 인권보호와 수사권조정의 문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정에서 본 국민의 인권’ 심포지엄 자료집(2011.8.29.).
- 석청호. 2012. 국립경찰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본 차기정부의 치안정책과제. 한국경찰연구. 11(3): 83-116.
- 석청호. 2003. 한국지역경찰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 93-122.
- 손봉선. 2005. 외사경찰론. 대명사.
- 신의기. 2003.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 경찰발전연구회자료집 제14회(2003. 3).
- 이강훈. 2012. 다문화 경찰활동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 이상안. 2005. 경찰행정학. 대명출판사.
- 이상원. 2005.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 이상원, 조현빈. 2012. 지역경찰 순찰근무의 효율성 검토 및 적정 소요인력 산출. 치안논총 28.
- 이선근. 2001. 수사경찰의 인권보호활동과 향후 방향. 경찰교육원 제2회 경·학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11.8.): 91-124.
- 이용혁. 2012. 치안정책의 패러다임 변혁이 필요하다. 치안정책리뷰. 31: 1-2.
- 조재형. 2011.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방안”. 경찰교육원 제2회 경·학 학술세미나 자료집(2011.11.8.).
- 최중술. 2008. 역대정부의 경찰정책과 이명박정부의 경찰정책과제. 한국자치행정학회보. 22(2): 357-380.
- 허경미. 2011. 경찰의 범죄 대응능력의 진단 및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4: 417-444.
- 황현락. 2011.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인권경찰의 발전 방향. 경찰교육원 제2회경·학 학술세미나 자료집(2011.11.8.): 9-58.
- Bayley, D. H. 1994. *Police for the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ight, Jon. 1992. *Crime Prevention in America*. Chicago: The Univ. of Illinois.
- Colquhoun, Ian. 2004. *Design out Crime: Creating Safe and Sustainable Communities*. Amsterdam : Elsevier.
- Eck, John E. 1993. Alternative Future for Policing. eds in *Police Innovation and Control of the Police-Problems of Law, Order and Community*. Springer-Verlag.
- Fischer, Robert J., E. Halibozek, and Green Gion. 2008.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Butterworth-Heinemann.
- Fuselier, G. Dwayne & Gary Noesne. 1990. Confronting Terrorist Hostage Taker.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U.S. Department of Justice. FBI. 1990. July.
- Palmiotto, M. J. 2005. *Policing: Concept, Strategies, and Current Issues in American Police Forces*. Carolina Academic Press.
- Peak, K. J & R. W. Glensor. 1999 *Community Policing and Problem Solvin: Strategies and Practice*. New Jersey : Prentice Hall Co.
- Roberg, R. 1976. *The Changing Police Role*. San Jose: Justice System Development, Inc.
- More, H. W. 1992. *Special Topics in Policing*. Cincinnati: Anderson Publishing Co.
- Saney, Parviz. 1986. *Crime and Culture in America: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 Greenwood Press.
- Skogan, Wealey G. 2006. The Promise of Community Policing. in *Police Innovation: Contrasting Perspective*. Cambridge Univ. Press.
- Wardlaw, Grant. 1994. *Political Terrorism: Theory and Counter-Measure*. 3r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son, Jeremy M. 2006. *Community Policing in America*, Routledge.
- 경찰청(www.police.go.kr)
-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 국가정보원(www.nis.go.kr)
- 통계청, 2012년 사회조사 결과보도자료(2012.12.20.)

---

**趙東運**: 대전대학교에서 “과학수사에 대한 형사절차법적 통계”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2007), 현재 경찰 교육원 정보보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분야는 경찰행정, 교육훈련, 과학수사, 국가안보 등이 며, 현재 한국치안행정학회 감사, 한국경찰학회 이사, 한국테러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c2716898@naver.com).

**朴炯均**: 동국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논문제목: “지방정부의 위기관리행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 인적재난의

사전대비를 중심으로)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분야는 경찰행정, 위기관리, 민간경비 분야이며, 현재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한국테러학회 부회장, 한국자치경찰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police@dhu.ac.kr).

투 고 일: 2013년 02월 05일

수 정 일: 2013년 03월 26일

게재확정일: 2013년 03월 29일

## Rapid Changing Environment.

Dong Woon Cho, Dong Kyun Park

Crime and delinquency in Korea are exceedingly widespread and pervasive. It will be clear that this condition is not the result of chance. Concern about crime in Korea has risen sharply. Not only has the crime rate increased continuously, but the nature of criminal acts committed has also changed. On the whole, crimes have become more vicious, impersonal, "senseless", and hence more alarming. So, crime have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 in Korea. The most visible el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the police. Police have a number of very significant duties ranging from providing civic assistance to anyone who needs it – sick and old people, children – to detecting crime, apprehending criminals, appearing in courts as prosecution witnesses, and other crime-related activities. The police are the par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direct daily contact both with crime and the public. In modern democratic societies the police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ensuring public safety because law enforcement is viewed as the primary solution to crime. The functions of policing are complicated. The range of police functions remains so broad and intertwined as to make separation of these functions impossible. Police functions are connected not only with the functions of other criminal justice components like courts and corrections but also with diverse governmental and social service agencies. The police are not separate from the people. and they draw their authority from the will and consent of the people. The police are the instrument of the people to achieve and maintain order: their efforts are founded on principles of public service and ultimate responsibility to the public. Policing has been undergoing rapid change. In the first decade of the twenty-first century, police agencies have been given an additional mission—the prevention of terrorism. To carry out this mission, police officers are being trained to be the first responders to terrorist scenes, to gather intelligence on terrorists, and to work closely with the federal government to make cities secure not only from crime but also from terrorists' act. In the twenty-first century, multiculturalism is quickly becoming an issue of primary importance. Police officers should perform the activit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communities. It is very important for police officers who are engaged in problem solving to understand how, when, where, why criminal events occur, rather than merely responding them.

**Key words:** multiculturalism, terrorism, policy agenda, police officers